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 전반 실태조사 및 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and Management Method of Pro-Japanese Record Information Contents

백 재 은 (Jae Eun Baek)**

〈 목 차 〉

I. 서론	IV.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 이용과 관리를 위한 방안 제언
II. 이론적 배경	V. 결 론
III.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 현황 조사 및 실태 분석	

요약 : 35년간의 일제강점기를 보내고 광복을 맞이한 우리나라에 있어서 독립과 광복은 중요한 가치를 지닌 역사로, 이와 관련된 각종 정보자원은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디지털화하여 다양한 기관 및 DB를 통해 서비스되고 있다. 반면, 일본 제국주의에 협력한 친일의 역사는 부정적 기억과 정서를 동반하는 불편한 역사이자 일본 잔재로 인식되어 관련 정보자원의 수집·관리·보존 및 공개에 대한 논의와 실천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나 친일의 역사도 우리나라 역사의 일부분이자 독립·광복과 동시대에 영향력을 미친 높은 연관성을 가진 역사이기에 진실을 왜곡하지 않기 위해서는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에 대한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와 이들을 관리·서비스하는 DB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문제점 - 수집·폐기·관리·보존·이용을 위한 공식적인 국가 제도 미흡, 전문 DB 부재 및 콘텐츠 혼재 - 을 도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개선 방안 -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를 위한 국가 제도 정립, 전문 DB와 메타데이터 구축 - 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 네거티브 헤리티지, 독립 기록 정보 콘텐츠, 역사적 가치, 일본, 일본 잔재, 일제강점기, 친일 기록 정보 데이터베이스,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 친일 역사, 친일 인물, 친일파

ABSTRACT : Korea's independence and liberation have been recognized as historically significant national values. Accordingly, related information contents have been actively collected, digitized, and provided through various institutions and databases at the national level. On the other hand, the history of collaboration with Japanese imperialism—commonly referred to as “pro-Japanese”—has been perceived as an uncomfortable legacy accompanied by negative memories and sentiments. As a result, discussions concerning the collection, management, preservation, and public access of related informational contents remain notably insufficient and fragmented. However, the history of pro-Japanese collaboration constitutes an integral part of Korean history and was contemporaneous with, and closely intertwined with, the processes of independence and liberation. In other words, to prevent historical distortion and ensure an accurate understanding of the past, systematic investigation and analysis of information contents related to pro-Japanese collaboration are essential. Therefore, in this study, the current status of pro-Japanese record information content was investigated.

KEYWORDS : Historical Significance, Independence Record-Contents, Japanese Colonial Period, Negative Heritage, Pro-Japanese History, Pro-Japanese Record Contents, Remnants

* 본 연구는 2025년도 덕성여자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덕성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jaeunb@duksung.ac.kr / ISNI 0000 0004 7875 8452)

• 논문접수: 2026년 2월 21일 • 최초심사: 2026년 3월 6일 • 게재확정: 2026년 3월 20일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7(1), 439-460, 2026. <http://dx.doi.org/10.16981/kliss.57.1.202603.439>

© Copyright © 2026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I. 서론

1945년 일본 제국주의의 폐망과 대한민국의 광복으로 우리나라는 국가 주권의 회복과 더불어 새로운 역사적 전환점을 형성하였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사회·예술·문화의 발전을 꾀하며 2025년 광복 80주년을 맞이하였다. 이에 국가와 공공기관, 각종 단체, 미디어에서는 광복을 기념하고 독립과 광복에 관련된(혹은 참여한) 인물, 기록, 사건, 지역 등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방식으로 역사를 전달하고 있다.

1910년부터 35년간 지속된 일제강점기는 일본의 제국주의의 식민 통치 아래에 사회·경제 수탈, 정치 탄압, 문화 통치, 민족 말살 정책이 자행된 시기로, 끊임없는 탄압 속에서 우리 국민은 독립을 목표로 다각적 저항과 항거, 독립운동가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 해방을 맞이하였다. 이 시대는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치욕적인 시대인 동시에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역사이기 때문에 독립과 광복에 영향을 미친 활동과 운동, 참여 인물 등에 대해 꾸준히 조사하고 연구하며 관련 정보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더욱이, 독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올바른 역사 교육을 실행하기 위해 국립 독립기념관을 중심으로 독립운동의 역사, 인물, 운동 등 다양한 정보에 접근과 활용이 가능하도록 다각도에서 매진하고 있고, 과거 사료(혹은 기록물)부터 현대 정보 콘텐츠까지 물리적·형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박물관, 기록관, 도서관 등의 기관에서 수집 및 디지털화하여 장기 보존과 함께 각 DB와 웹 사이트 시스템에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독립과 관련된 기록 정보 콘텐츠는 다양한 매체, 형식, 내용 등으로 생산되어 방대한 양이 존재하며 온·오프라인 공간에서 광범위하게 축적되어 남녀노소 모든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반면에, 동시대 우리의 역사로 일본 제국주의에 협력하여 우리 민족에게 경제적·물리적·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제공한 ‘친일’에 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그리 높지 않고, 관련된 기록 정보 콘텐츠의 체계적인 수집과 관리, 공개, 이용을 위한 시행도 현재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

역사는 공로(功)와 과실(過)로 이루어진 사실의 총체이다. 국가와 국민에게 역사는 ‘공, 과’와 상관없이 과거 발생한 정확한 사실이자 중요한 정보이고 증거이기에 사실 그대로 후대에 전승해야 하고, 이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있다. 자체적인 판단, 감정적 평가에 의한 역사 구분이 아닌 보존(保存)과 보전(保全), 이용, 폐기·청산 등을 목적으로 지속적인 (사후) 평가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논의를 실행하고 내포하고 있는 가치를 분석하여 최대한 정확하고 올바르게 역사를 다음 세대에 전달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는 ‘독립’에 대해서 애국을 목적으로 한 활동이자 공(功)의 역사로 평가하여 적극적인 보존·활용을 실행하고 있지만, ‘친일’은 매국 행적이고 일본 잔재(殘滓)이자 부정적인 과(過)의 역사로 판단되어 친일과 관련된 기록 정보 콘텐츠의 수집, 관리, 보존(保存), 보전(保全) 등에 대한 논의와 실행을 본격화

되고 있지 않다. 친일의 역사는 우리에게 불편한 역사이자 유산으로 대중에게 부정적인 기억이나 감정으로 전달되어 정서적 반감과 불편함을 불러일으키는 대상, 네거티브 헤리티지(Negative Heritage)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친일의 역사와 이들을 나타내는 기록 정보 콘텐츠도 우리의 역사이자 독립, 광복에 동시에 영향을 미친 역사이기에 진실을 왜곡하지 않고 은폐하지 않기 위해서는 명백한 평가를 통한 청산과 보존이 진행되어야 한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 민족에게 과실((過)의 역사이자 불편한 역사로 인식되는 친일의 역사를 담은 기록 정보 콘텐츠를 대상으로 이들 콘텐츠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다만, 현재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에 관한 연구가 아직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여 실태조사와 현황 분석을 중점적으로 수행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친일과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에 대한 개념적 정의

친일(親日)은 '친하다(親)'와 '일본(日)'의 합성어로, 단어를 그대로 풀어 표기하면 '일본과 친하게 지내다', '일본에 우호적이다'로, 이는 사전적 의미에서 중층적·긍정적인 관점이 적용된 개념이다. 현 한국 사회에서 '친일'은 역사적 맥락에 따라 상이한 함의를 내포하여 중의적 관점, 크게 2개의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나는 앞서 기술한 일본에 대해 우호적 태도를 일컫는 의미이며, 다른 하나는 '일제강점기에 일제와 야합하여 그들의 침략·약탈 정책을 지지·옹호하여 추종하는(표준국어대사전)' 부정적인 개념을 나타내고 있다. '친일'의 이중적 의미 구조는 우리나라가 과거 일본에 의해 주권이 강제 약탈 되고 일제강점기라는 치욕스러운 역사를 겪으며 형성된 개념으로, 오늘날까지 동일한 표기어이자 동음이의어로 상반된 의미를 나타내며 2개의 의미 대상, 상황, 환경 등에 따라 선택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에 본 장에서는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를 조사하기 위해 이에 해당하는 부정적인 관점에서의 '친일'에 대한 정의와 범주를 정리하고자 한다. 다만, '친일'의 용어 정의는 학술적, 역사적, 문화적, 시대적 등 관점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고, 정의를 명확히 정립하기 위해서는 다방면의 연구와 상세한 분석이 필요하다. 본 장에서 '친일'의 정의와 범주를 명확히 확립하는 것은 쉽지 않기에, 본 연구에서 활용할 '친일'에 대한 정의와 범주를 한정적으로 정리하여 기술하였다. 이는 친일 관련 법령, 기사, 사전 등을 수집하여 내용 및 의미를 발췌·비교하여 <표 1>과 같이 재정리하였다.

〈표 1〉 ‘친일’ 관련 내용 및 정의들

유형	‘친일’ 관련 내용 및 정의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 통치에 협력하고 우리 민족을 탄압한 반민족행위자가……(줄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1조) • “친일반민족행위”라 함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행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권을 지키기 위하여 일본제국주의와 싸우는 부대를 공격하거나 공격을 명령한 행위 2. 국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단체 또는 개인을 강제해산시키거나 감금·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단체 또는 개인의 활동을 방해한 행위 3. 독립운동 또는 항일운동에 참여한 자 및 그 가족을 살상·처형·학대 또는 체포하거나 이를 지시 또는 명령한 행위 <p>… (줄임)</p> 20. 일본제국주의와 일본인에 의한 민족문화의 파괴·말살과 문화유산의 훼손·반출에 적극 협력한 행위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일파라는 명칭은 당시 기득권 사회지도층 세력인 부일배를 일컫는 말이었다. 부일은 일본 제국주의에 부역하리라는 뜻으로 단순히 일본과 친하다라는 개념을 넘어 <u>일본 제국주의의 침략 의도를 적극적으로 도운다는 의미로, 친일반민족 행위자라고 칭하기도 한다(최병문, 2019).</u> • 일본 제국주의에 협력한 자들을 가리키는 명칭으로는 친일파 외에도 매국노, 반민족행위자 등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매국노는 <u>을사조약 정미칠적 경술 국적처럼 일신의 부귀영화를 위해 국권을 일제에 넘기는 데 협조한 무리를 의미 한다(민족문제연구소, 발행년불명).</u>
사건 & 백과사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제강점기에 일제와 <u>야합하여 그들의 침략·약탈 정책을 지지·옹호하여 추종하다(표준국어대사전)</u> • 친일문학 - 일제강점기에 일본의 식민주의 정책에 협조한 문학(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 친일 인명 - 을사조약 전후부터 1945년 8월 15일 해방에 이르기까지 일본 제국주의의 국권 침탈·식민 통치·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함으로써 <u>우리 민족 또는 타민족에게 신체적·물리적·정신적으로 직·간접적 피해를 끼친 친일반민족행위와 부일 협력행위를 한 인물 중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에서 선정한 자</u>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제의 국권 침탈에 협력한 자 2. 일제의 식민통치기구에 참여한 자 3. 항일운동을 방해한 자 4. 일제의 침략전쟁에 협력한 자 5. 지식인·종교인·문화예술인으로서 일제의 식민 통치와 침략전쟁에 협력한 자 6. 기타 친일행위자 …(줄임) (친일인명사전)

본 연구에서 ‘친일’은 일본제국주의의 식민 통치, 국권 침탈, 약탈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 및 참여하거나 관련 정책과 활동을 동조·부역함으로써, 우리 민족 또는 타민족에 신체적·물리적·정신적 피해를 끼친 모든 행위 및 그와 관련된 활동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동의어와 반의어는 명확한 확인과 정립이 어려워 비슷한 의미를 담은 유의어로 부역(附逆), 부일(附日), 반의어로 항일(抗日)과 반일(反日), 그리고 관련어로 매국(賣國), 독립(獨立), 호국(護國)을 용어 범위에 포함하여 제시하였다. 그리고 ‘친일’의 정의와 용어 관계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를 〈표 1〉에서 규정한 친일과 관련된 개인·국가적 모든 활동 및 행위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모든 유형의 콘텐츠(친일 행위에 의해, 친일 행위를 위해 생산·제작된 정보자원)로 정의하였다(〈표 2〉 참조).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의 유의어는 일제강점기 친일 행위 실현에 참여한 인물, 지역, 시설, 건축물, 상징물 등을 나타내는 친일 문화유산과 친일 문화 잔재로 구성하였고, 이들 콘텐츠의 범위를 시간과 유형으로 구분하여 설정하였다. 시간적 범위는 2개의 관점으로 ① 을사조약(1905년)부터 해방(1945년)까지 생산·제작된 정보자원,¹⁾ ② 광복 이후(20세기 후반)부터 현재까지 생산·제작된 정보자원으로 정리하였고, 유형의 범위는 해당 시기에 생산 및 제작된 모든 유형의 매체(문서와 도서, 신문과 잡지, 사진과 도면, 녹음 음성과 동영상, 건축물과 기념물 등)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한 형식의 정보자원을 모두 포함하여 구성하였다.

〈표 2〉 본 연구에서 활용할 ‘친일’과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의 정의

친일 (親日: Pro-Japanese)				
용어	정의	•일본제국주의의 식민 통치, 국권 침탈, 약탈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 및 참여하거나 관련 정책과 활동을 동조·부역함으로써, 우리 민족 또는 타민족에 신체적·물리적·정신적 피해를 끼친 모든 행위 및 그와 관련된 활동		
	유의어	부역(附逆), 부일(附日)	반의어	항일(抗日), 반일(反日)
	관련어	매국(賣國), 독립(獨立), 호국(護國)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 (Pro-Japanese Record Contents)				
용어	정의	•친일을 목적으로 행해진 개인·국가적 모든 활동, 행위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콘텐츠		
	유의어	친일 문화유산(Pro-Japanese Heritage), 친일 문화 잔재		
	시간적 범위	① 을사조약(1905년 11월 17일)부터 광복(1945년 8월 15일)까지 생산·제작된 콘텐츠 ② 광복(1945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생산·제작된 콘텐츠		
	유형의 범위	•모든 유형의 매체를 활용하여 생산·제작된 콘텐츠(비 디지털(Non-digital), 디지털화(Digitized), 디지털(Born-Digital)로 생성된 콘텐츠) •텍스트(문서, 도서/서적, 책자, 신문 등), 이미지(사진, 지도, 도면), 음성(녹음 음성 등), 영상, 기타(건축물, 시설) 등(복합체 포함)		

2. 관련 연구

친일 관련 연구는 건축학, 기록관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학, 어문학, 예술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수행이 가능하며 단독 혹은 융복합 주제로 연구 진행이 가능한 주제이다. 그러나 ‘친일’

1) 시간적 범위 가운데 ①의 설정은 법령과 사전에서 명시하는 친일 활동 기간 - 일제강점기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서 친일반민족행위로 표현되는 기간(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친일 인명사전에서 친일 행적으로 설정한 기간(을사조약 전후부터 1945년 8월 15일 해방까지), 그리고 일제강점기 기간(1910년부터 1945년까지) - 을 정리하여 모든 기간이 포함되는 ‘을사조약이 강제 체결된 1905년부터 광복된 1945년까지’를 본 연구에 적용하였다.

‘친일의 역사’는 연구적 관점에서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분야로, 학술 연구적 관심이 부족한 상황이고,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에 관한 연구도 적극적으로 실행되고 있지 않아 앞으로의 발전이 필요한 영역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와 유사한 주제를 가지고 친일의 역사와 관련성을 나타내는 역사학, 기록관리학으로부터 관련 연구를 확인 및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살펴보았다.

역사학의 관점에서 김민철(2005)은 21세기 이후 전개되고 있는 친일 문제, 친일 논쟁을 3개의 키워드(인식, 책임, 기억)로 구분하여 각각의 시각에서 이들 논쟁을 정리하였고, 이 과정에서 친일 행위, 친일의 유형 등을 살펴봄에 친일 청산에 있어 규칙의 확립과 공정한 기억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기술하였다. 이 논문은 친일 청산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집합적 기억’의 한 주체로 국가와 우리는 최대한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들 기억을 재구성해야 한다고 직접적으로 언급하였다. 본 연구는 친일 문제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어야 하고, 다방 면에서 규칙을 확립시키며 올바른 기억을 이어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연구 배경에 적용하여 방향성 구성에 참고하였다. 이어서 서동희(2015)는 친일 관련 논쟁이 지속되는 이유 중 하나를 친일과 청산 문제의 실패로 언급하였다. 친일과 청산을 위해 해방 직후 반민족 특별 조사 위원회 제정, 1990년대 이후 친일 인명사전 편찬, 2000년대 이후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행적에 대한 사실 규명 등을 진행했으나, 아직 명확하게 청산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 나열하며 해방 직후의 사법적 친일 청산 활동과 2000년대 이후의 역사적 친일 청산 활동을 비교하고 사법적·역사적 청산 활동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봄에 앞으로의 친일 청산 문제 해결에 대해 고찰하였다. 본 연구는 이 논문에서 장기간 지속된 친일 청산 활동과 이들의 중요성 및 필요성을 확인하여 참조하였고, 친일 청산 활동의 일환으로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가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았다.

기록관리학의 관점에서 우지원과 이영학(2011)은 과거사 관련 위원회(일제강점하 강제 동원 피해진상규명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 진상 규명 위원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의 기록 정보 콘텐츠의 구축 필요성과 구축방안에 대해 기술하였다.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기록 정보 콘텐츠 보유 현황을 파악하고, 활용 가치가 있는 기록물 선별, 재분류, 기록물의 연계 등을 통한 구축 방안을 3가지 - 기록물 선별 지침 필요, 교수·학생을 위한 콘텐츠 구축, 연구자를 위한 구축 - 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이 논문과 본 연구는 과거 일본과 관련성을 가진 특정 기록 정보 콘텐츠의 현황과 유형을 분석하고 용어 정리를 하며 이들 콘텐츠의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이 논문을 통해 과거사와 관련된 콘텐츠 활용의 필요성과 중요성, 나아가 이용자 요구 시 정보 제공을 위한 콘텐츠 구축방안이라는 관점을 본 연구에 도입하여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의 활용 방안에 대해 고찰하여 적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친일의 관점은 아니지만, 역사적으로 관련성을 가진 독립운동 디지털 아카이브 구

축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았다. 서소리와 조우제(2022)는 역사적 중요성을 가진 독립운동을 대상으로 하여 디지털 아카이브가 수행할 수 있는 역할과 기능에 대해 제시하고, 독립운동에 관한 방대한 자료를 다루는 독립기념관을 중심으로 산하 운영 중인 4개의 독립운동 정보시스템의 현황 조사, 자료 분석 등을 실시하여 독립운동에 대한 지식을 탐구할 수 있는 공간으로 독립운동 디지털 아카이브의 구축을 제안하였다. 디지털 아카이브의 구축 대상은 다르지만, 독립운동이라는 우리나라 역사의 중요 기록물을 중심으로 이용, 관리, 보존하기 위한 DB 설계를 제안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큰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이 논문을 바탕으로 역사 기록물 DB 구축을 위한 당위성과 필요성, 중요성 그리고 활용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 분석하여 본 논문에 적용하였다.

Ⅲ.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 현황 조사 및 실태 분석

1.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 현황 조사 및 분석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는 1905년부터 현재까지 친일을 목적으로 친일을 위해/친일에 의해 생산·제작된 각종 유형의 정보자원으로, 대중적 인식 속에서 네거티브 문화유산이자 청산의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다. 더욱이, 일제(일본제국주의)의 잔재(殘滓)로 인식되면서 충분한 조사와 분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폐기 및 철거 처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21세기 이후 역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이들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불편하고 기억하기 싫은 아픈 역사이지만 진실을 후세에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는 의무와 책임이 강조되었고, 친일 기록의 보존(保全)과 보존·관리, 그리고 이용에 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하기 시작했다. 다만, 이와 같은 관심은 친일 관련 정책, 인물, 법령, 관련 콘텐츠(신문 기사, 사진, 영상) 등과 같은 자료보다 건축물, 유적, 동상 등에 중점화되어 있고 이들도 동시대적 합의에 이르지 못해 복원되지 못하거나 철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김미진, 2018).

친일의 역사는 40년간 우리나라에 일어난 역사적 사실로 우리 역사의 일부분이고 독립, 항일, 반일 운동(가) 등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에 이들 콘텐츠에 대한 충분한 분석과 조사 없이 이루어지는 폐기와 배제는 역사적·증거적 가치를 지닌 정보자원이 사라지거나 은폐 혹은 왜곡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국민적 이해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는 대상이지만 우리의 역사를 올바르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실질적인 방안으로 개념적 정립, 체계적인 보존·보존 정책 수립, 콘텐츠 활용 방안 및 디지털화 등에 대한 계획을 설계하고 진행해야 한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현실적인 방안의 구상 및 설계에 앞서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와 관련된 제도, 시스템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여 현재 상황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실태조사와

분석은 앞서 2.1장에서 나열한 ‘친일’과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의 개념을 바탕으로 제도적, 기술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진행하였다.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를 표현할 수 있는 핵심 주제어로 ‘친일’, ‘친일 기록’, ‘친일 잔재’, ‘친일 문화유산’을 설정하여 이와 관련된 법령과 정책, 데이터베이스를 각각 살펴보고, 이들 조사를 통해 알게 된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의 특성을 정리하여 기술하였다.

가.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 관련 법령과 정책

핵심 주제어를 통해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에 관련된 법령과 정책을 조사한 결과, ‘친일’ 관련 법령은 현행법령 가운데 자치법규 4건이 존재했고, 각 지역(광주, 울산, 충남)에 남아있는 친일 잔재와 친일 상징물의 조사 및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법규와 사용 제한을 위한 조례로 제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친일 기록, 친일 문화유산, 친일 잔재’를 직접적인 대상으로 정립한 법령, 정책, 가이드라인은 확인 결과 0건으로,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를 위한 행정적인 기준은 현재 작성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관련 법령을 추가 검토하기 위해 주제어 범위를 확대하여 친일 잔재의 유의적 표현 ‘일제 잔재’,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의 생산 기간(1905년부터 1945년, 현재까지)이 시기적으로 근현대에 속하여 ‘근현대 유산’을, 그리고 친일 행적의 유사 개념으로 표현이 가능한 ‘반민족행위’를 포함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표 3〉 참조).

‘일제 잔재’를 다루는 관련 법령은 지역과 학교에 남아있는 일제 잔재의 청산을 목적으로 각 시, 도, 교육청 등에서 정립한 자치법규 20건, ‘근현대 유산’ 관련 법령은 근현대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및 활용하기 위한 현행 법률 3건, 각 지역의 근현대 문화유산을 보존 및 활용하기 위한 자치법규 8건 그리고 ‘반민족행위’에 대한 법령은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하고 당시 친일반민족행위로 추제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기 위한 현행법령 2건, 이들 법령의 시행령 2건이 제정되어 있었다. 이들 법령, 법규, 정책 등은 대부분 일제 잔재의 청산과 진상규명을 주요 목적으로 설계되었고, ‘근현대 유산’ 관련 법령의 경우 “개항기 전후부터 현재에 이르는 동안 형성된 문화유산 중 역사적·예술적·사회적 또는 학술적인 가치가 인정되어 특별히 보존할 필요가 있는(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으로 목적이 명시되어 있어 부정적 가치로 인식되는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와 상반되는 개념적 범주를 나타내고 있었다. 다만, ‘반민족행위’ 관련 법령에서는 진상규명을 위해 위원회를 설립하고 “1) 친일반민족행위 조사 대상자의 선정, 2) 조사 대상자가 행한 친일반민족행위의 조사, 3) 친일반민족행위와 관련된 국내외 자료의 수집 및 분석, 4) 위원회 활동에 관한 조사보고서의 작성·발간 및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사료의 편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위원회 활동에서 생산, 수집된 정보,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사료”는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로 포함이 가능하기에 이들 법령은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와의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39건의 제정·시행되는 법령은 ‘일제 유산, 일제 잔재, 일제 상징물’과 같이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와 유사한 대상을 다루고 있지만 대부분 청산과 진상규명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계되어 있고,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며 이들의 선정부터 수집, 폐기, 보존, 공개 및 활용에 대한 법적·행정적 기준은 제공되고 있지 않았다. 앞서 ‘반민족행위’와 관련된 법령의 경우 법령을 위한 업무 수행에 있어 정보자원을 생산하고 있지만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 관련 법령으로 보기에 개념적 한계를 가지고 있고 법령의 목적과 적용 범위에서 조금 차이를 보이고 있기에 현재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와 관련된 독립적인 법령과 정책은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표 3〉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 관련 법령·정책

핵심 주제어	유형	건수	해당 법령, 정책, 규칙 등의 내용
친일	자치법규	4건	• 각 지역에 남아있는 ‘친일 잔재’, ‘친일 상징물’을 조사 지원 및 연구 활동을 위한 규칙
친일 기록, 친일 문화유산, 친일 잔재	-	0건	-
일제 잔재	자치법규	20건	• 각 지역과 학교에 남아있는 ‘일제 잔재’ 조사 및 청산을 위한 활동 규칙
근현대 유산	현행법령	3건	• 근현대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및 활용하기 위한 법률 및 각 지역의 조례
	자치법규	8건	
반민족행위	현행법령	2건	•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하고 당시 친일반민족행위로 추재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기 위한 법
	시행령	2건	

나.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 관련 데이터베이스

이어서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를 관리 및 서비스하는 DB와 기관 웹 사이트를 동시다발적으로 살펴보았다. 우선,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 관련 DB를 조사하기 위해 콘텐츠의 서비스 및 소장 여부 확인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현재 ‘친일’을 주된 주제로 다루는 전문 DB는 구축되어 있지 않다. 이에 우리나라 역사 관련 정보자원을 소장하여 제공하는 기록관, 국가대표 도서관, 연구소, 관련 기관 등의 DB와 웹 사이트를 수집하여 ‘친일’과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 이들 유의어, 반의어, 관련어, 앞서 기술한 핵심 주제어를 검색하며 관련 정보자원의 소장 여부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유사 정보 혹은 관련 정보를 URL로 제시하여 타 DB와 연동된 경우, 이들 DB도 추가 검토하여 조사 대상에 포함 후 조사 및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와 같이 DB 조사 및 수집을 진행한 결과, 현재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를 수집하여 관리하거나 서비스하는 웹 사이트와 DB는 총 10개로, 이들 가운데 1개의 웹 사이트는 운영 중단으로 접속이 불가능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접근이 가능한 9개의 DB(㉠ 경기도 친일 문화 잔재 아카이브, ㉡ 국가기록원, ㉢ 국립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 국립중앙도서관, ㉤ 근대 기록 문화 아카이브,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근현대 아카이브, ㉦ 독립기념관, ㉧ 민족문제연구소, ㉨ 한국사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의 상위 주제 및 카테고리 명, 유형, 건수 등의 정보를 수집하였고, 이들을 대상으로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의 특성 및 내용에 대해 조사 및 분석을 수행하였다(〈표 4〉 참조). 단, 콘텐츠에 대한 분석은 ‘다.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에서 정리하여 기술하였다.

각 DB를 간단하게 기술하면 ㉑ 경기도 친일 문화 잔재 아카이브는 경기도 메모리에서 경기도를 중심으로 친일 문화 잔재 청산 추진을 위해 구축한 지역 기반 아카이브로, 본 연구에서 정의한 ‘친일’에 대한 개념에 부합하는 콘텐츠를 체계적으로 수집 및 관리, 제공하도록 설계된 데이터베이스이다. 친일 인물, 시설, 교육 자료, 상징물로 표현된 카테고리 아래에 613건의 콘텐츠가 소장되어 있고, 이들은 디지털화된 사진과 악보, 관련 설명(콘텐츠)을 웹콘텐츠로 제공하고 있었다. ㉒ 국가 기록원에서는 188,060건의 친일 관련 정보자원을 검색 결과로 제공하고 있으며 원문을 모두 디지털화하여 소장하고 있었다. 그러나 검색된 대부분의 정보자원은 개념적인 적합성보다 키워드 단순 매칭에 의한 결과로, 친일과의 연관성을 재검토하니 총 918건의 콘텐츠가 친일과의 관련성을 보이고 있었다. 그리고 ㉓ 국립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아카이브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과 참여 인물을 중심으로 유물, 도서, 사진 등 총 72건의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들 가운데 6건의 학술/연구 문서는 현대에 발간된 정보자원이고, 다른 정보자원들은 친일파와 관련된 독립운동가 중심의 자료로 다수 구성되어 있었다.

이어서 ㉔ 국립중앙도서관의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 DB에서 25건의 친일 관련 기록 콘텐츠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이들은 친일파(親日派), 한일 강제 합방, 국가 보안법 위반 등과 관련성을 가진 기사 자료로 모두 이미지 디지털화하여 서비스되고 있었다. ㉕ 근대 기록 문화 아카이브 DB에서는 시기와 내용에 따라 분류되어 일제강점기, 친일과 관련된 정보자원 18건이 검색되었다. 이들 가운데 본 연구에서 정의한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에 해당하는 정보자원은 총 4건으로 확인되었고, ㉖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의 근현대 아카이브는 디지털 자료, 잡지, 라디오 음성, 영화 등과 같이 다양한 유형의 친일 관련 콘텐츠를 131건 소장하고 있었으며 이들 모두 본 연구에서 정의한 ‘친일’에 적합한 내용의 정보자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리고 ㉗ 독립기념관의 한국 독립운동 정보시스템은 한국 독립운동 인명사전, (한국) 독립운동사, 의병, 일제 침략, 제한 선교사 등의 여러 상위 주제어 아래에 문서, 간행물, 도서, 유물, 사진/필름 등 다양한 유형의 매체로 생산된 총 1,395건의 친일 관련 정보자원을 소장하고 있었고, 이들 가운데 단행본의 대부분은 친일반민족 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서 21세기 발간한 친일반민족행위관계자료집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㉘ 민족문제연구소는 한일 과거사 청산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식민지 역사박물관, 역사 콘텐츠, 친일 인명사전 등을 통해 대량의 친일 관련 정보자원을 소장하고 있었다. 친일 인명사전을 발간하고 친일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모두 디지털화 진행 후 873건의 웹 콘텐츠로 전달하고 있고, 이들의 유형은 사진과 설명, 팟캐스트(음성), 도서, 보고서, 간행물, Youtube 영상 등으로, 연구소 웹 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었다. 단 친일 인명사전은 도서로 발간되어 웹 사이트에서는

별도로 제공하고 있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① 한국사 데이터베이스는 시대(고대, 고려, 조선, 근대)와 유형(도서, 총서, 신문 등)으로 구분하여 친일파, 친일 관보, 인물·단체, 반민특위 등의 상위 주제 아래에 친일 관련 사료 총 2,682건을 제공하고 있었다. 이 DB에서는 정보자원에 따라 타 DB(예를 들면 삼일운동 데이터베이스(국사편찬위원회))와 연동하여 관련 기록 콘텐츠의 URL을 전달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9개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각 DB에서 제공하는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를 표현하는 상위 주제, 유형, 서비스 및 구성하는 방식 그리고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조금씩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디지털화하거나 디지털로 생산·제작하여 정보를 소장 및 제공하고 있었고, 이들 콘텐츠 대부분은 본 연구에서 정의한 ‘친일’과 높은 연관성을 가진 정보자원이었다. 콘텐츠는 상세한 설명을 명시하고 있었으나, 상징물(탑, 기념비, 안내관 등), 유물(배지, 의복, 도장, 등), 교육자료(교과), 동영상의 경우 별도의 설명 없이 디지털 이미지(사진, 악보)만 탑재되어 있거나 영상만 삽입되어 있어 친일과 관련성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었고, 일부 DB에서는 콘텐츠의 메타데이터 요소, 특히 기술 요소가 자세하게 작성되어 있지 않아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로서의 특성을 제대로 갖추었는지 알 수 없었다.

〈표 4〉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를 관리 및 서비스하는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	상위 주제	유형 ²⁾	건수
① 경기도 친일 문화 잔재 아카이브	친일 인물	시청각 기록물(사진), 전자기록(텍스트)	260건
	친일 시설	시청각 기록물(사진), 전자기록(텍스트)	250건
	친일 교육 잔재	시청각 기록물(악보)	89건
	친일 잔재 상징물 안내관	시청각 기록물(사진), 전자기록(텍스트)	14건
②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 기록	종이 기록물(문서)	918건
③ 국립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외무성(外務省)	종이 기록물(도서)	30건
	대한민국임시정부 사람들	시청각 기록물(사진)	30건
	대한민국 임시정부 자료 - 외교문서	종이 기록물(학술/연구 문서)	6건
	친일 단체	종이 기록물(문서)	6건
④ 국립중앙도서관	친일파		22건
	한일강제합방	간행물(신문)	2건
	국가 보안법 위반		1건
⑤ 근대 기록 문화 아카이브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사회운동	시청각 기록물(사진)	4건
⑥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근현대 아카이브	현대사 현장	전자기록(영상)	15건
	박물관 활동 기록	종이 기록물(문서)	115건
	움직이는 현대사	시청각 기록물(영상)	1건

2) 콘텐츠의 유형은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의 역사적 가치를 고려하여 기록물의 범주에 적용, 기록물의 유형을 참고하여 구분을 진행하였고 현재 이들은 모두 디지털화되거나 디지털로 생산 및 제작되어 웹 콘텐츠로 서비스되고 있었다.

데이터베이스	상위 주제	유형 ²⁾	건수	
㉔ 독립기념관	한국 독립운동	종이 기록물(전적)	69건	
		종이 기록물(문서)	126건	
		행정 박물(의복, 배지, 도장 등)	19건	
		시청각 기록물(사진/필름)	27건	
	대한민국임시정부	종이 기록물(문서)	16건	
	독립운동가	종이 기록물(문서)	184건	
	일제 침략	시청각 기록물(마이크로필름)	14건	
	미주홍사단	전자기록(텍스트)	2건	
	독립운동 의병	간행물(신문)	260건	
		전자기록(텍스트)	1건	
	재한선교사 보고문건	종이 기록물(문서)	4건	
	대한인국민회	전자기록(텍스트)	20건	
	독립운동가 열전	간행물	10건	
	발간자료 - 총서	간행물	2건	
	한국 독립 운동사 연구	간행물	7건	
	한국 독립운동의 역사	연속간행물	125건	
		종이 기록물(도서)	457건	
		종이 기록물(문서)	3건	
		종이 기록물(교과서)	1건	
		종이 기록물(명부)	4건	
종이 기록물(전기)		32건		
시청각 기록물(도록/화보)		4건		
종이 기록물(논문)		1건		
시청각 기록물		7건		
㉕ 민족문제연구소		식민지역사박물관	시청각 기록물(사진), 전자기록(텍스트)	120건
	역사 콘텐츠	시청각 기록물(사진), 전자기록(텍스트)	144건	
		전자기록(영상)	300건	
		전자기록(음성)	237건	
		종이 기록물(도서)	40건	
		전자기록(보고서)	12건	
		간행물	20건	
	친일 인명사전	종이 기록물(도서)	미제공	
	㉖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한국 현대사료 DB)	대한민국사, 주한미군사, 친일파	종이 기록물(도서)	927건
		인물·단체	시청각 기록물(사진), 전자기록(텍스트)	96건
친일 관보		전자기록(텍스트)	23건	
친일		간행물(신문·잡지)	906건	
반민특위조사		종이 기록물(편년 자료·문서)	613건	
근대 전환기		종이 기록물(목록·총서)	113건	
친일파		종이 기록물(문서)	4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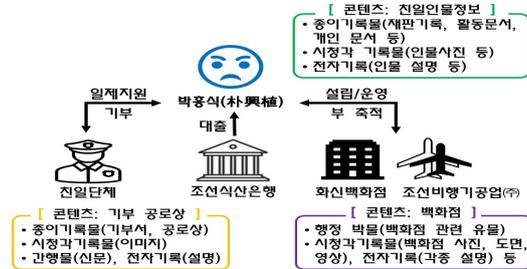
다.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

앞서 기술한 9개의 DB 조사를 통해 현재 서비스되는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이들 콘텐츠에 대해 정리하여 간단히 기술하면, 우선 2.1장에서 정의한 범위에 따라 ① 1905년부터 일제강점기, 1945년 광복까지로 해당 기간 친일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활용

되거나 친일을 목적으로 생산된 정보자원, ② 광복 이후부터 현재까지 친일 행위·활동과 이에 관련된 모든 인물, 지역, 집단, 기업, 시설 등에 대해 널리 알리거나 규명, 친일 잔재의 조사와 청산 등의 목적으로 생산된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었다. 특히, 2005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출범과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조사위원회, 법령 등의 정립으로 관련 도서, 보고서, 친일 인명사전, 구술 사료집 등이 지속적으로 발행 및 발간되고 있었다. 이들 콘텐츠는 생산·제작 시기에 따라 조금씩 유형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으나 시대에 따라 기록물 유형을 구분하여 콘텐츠를 살펴본 결과, 시기 ①에서 생산된 콘텐츠는 기본적으로 비디지털(non-digital) 형태의 정보자원으로, 종이 기록물(도서, 문서 등), 간행물(신문·잡지), 시청각 기록물(사진, 도면, 악보 등), 행정 박물(건축물, 비석, 동상, 의복, 도장, 각종 도구 등)로 구성되어 있고, 기간 ②의 콘텐츠는 비디지털 형태의 정보자원, 디지털화(digitized)를 통해 재제작한 정보자원,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한 디지털 정보자원(born-digital)으로, 종이 기록물(도서, 총서, 문서, 논문, 보고서 등), 시청각 기록물(사진, 영상, 음성 등), 간행물, 행정 박물(안내판, 현판 등)과 함께 전자기록(디지털 기기로 작성된 텍스트, 영상, 음성 등)으로 생산되어 제공하고 있었다. 다만, 현재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는 모두 웹 콘텐츠로 변환되어 DB에서 제공되고 있다.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는 1905년부터 단일 형태 혹은 복수 유형의 콘텐츠로 생산되고 있으며 콘텐츠 간의 복잡한 관계망 형성과 내용 간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가 가진 특수성으로, 이들 콘텐츠는 인물, 단체, 회사, 기관 등과 서로 관련성을 가지고 있고 '친일'의 상반된 의미 '독립, 반일, 항거' 등의 관련 콘텐츠와도 상관성을 나타내고 있다. 단편적인 예시로 '친일 기업인 박흥식³⁾'에 대한 콘텐츠를 활용하여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가 지닌 실질적 배경과 다양한 콘텐츠 간의 관계를 정리하여 살펴보았다. 박흥식 관련 키워드는 조선총독부, 조선식산은행, 화신백화점, 조선비행기공업 주식회사, 종로경찰서, 매일신보, 삼천리(신문) 등으로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고, 이들은 종이 기록물(계약서, 공로 상장, 체포 영장 등), 간행물(신문, 보고서 등) 시청각 기록물(도면, 백화점 사진, 인물사진, 전경 사진 등), 행정 박물(공로 상패, 현판, 관련 시설물 등)로 제작·생산되어 제공되고 있었다(〈그림 1〉 참조). 박흥식 관련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는 각각 단일의 내용, 유형 혹은 특정 주제 및 내용 등으로 구성된 정보자원이지만 각종 행적과 활동, 여러 인물, 기관, 상황 및 시간에 의해 정보자원의 인과관계, 상호 관계 등 서로 간의 연관성을 나타내고 있었다. 즉,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는 지역, 시대, 유형과 내용, 형식 등 제한 없이 여러 주제와 밀접하게 연관된 콘텐츠이자 다각도에서 다층적·관계적 구조를 지닌 콘텐츠로 정확한 이해와 콘텐츠의 관리, 이용, 보존 등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검토와 분석이 필요하다.

3) 박흥식(친일 인물 정보)은 기업가로 여러 사업을 통해 부를 축적하여 화신백화점을 설립하였고 이 과정에서 조선총독부 지원의 조선식산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며 일제의 신뢰 아래에 계속 부를 축적하여 군수 물자 제공을 위한 조선비행기공업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축적한 부를 국방헌금에 기부하여 조선총독부로부터 공로상을 받았다. 광복 이후 친일 기업인으로 일제에 행한 반민족행위가 확인되어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1호로 체포되었다.



〈그림 1〉 박흥식의 친일 행적과 관련 콘텐츠 예시

본 연구는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 전반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제도적·기술적 관점에서 법령과 정책,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이들을 통해 수집된 콘텐츠에 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였다. 결과적으로 현재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에 필요한 기반은 여러 방면에서 아직 미흡한 상황으로, 이들을 올바르게 청산하고 관리, 보존, 활용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다. 다만, 본 연구의 조사 과정에서 수집 및 활용된 콘텐츠를 현존하는 모든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로 단정하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이를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정하고, 다음에서는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를 분석하여 그 함의를 고찰하였다.

2.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 실태 분석 및 고찰

가.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의 수집·폐기·관리·보존·이용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공식 제도 미흡
 친일의 역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점차 증가하면서 2005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설립되었고 2006년 일제강점기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약칭: 반민족규명법)이 제정되었다. 2011년에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약칭: 친일재산귀속법)이 입안되고 2012년 반민족규명법이 일부 개정되어 현행법령으로 시행되면서 반민족행위에 관한 관심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반해, 친일에 관련된 콘텐츠는 일제 잔재로 평가되어 폐기되거나 청산되고 있고, 이를 주된 대상으로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의 중요성과 필요성, 올바른 처리를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이나 제도, 정책과 같은 관리 체계는 미흡한 상황이다. 앞서 3.1장의 <표 3>에서 나열하였듯이 현행법령들은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의 유사 대상을 청산 및 진상규명 등의 목적으로 제정되어 있거나 친일반민족행위 조사 및 확인을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다루고 있다. 예를 들어 '친일 잔재 청산을 위한 조례'의 경우,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의 조사와 연구라는 관련성을 보이고 있으나 이들은 폐기와 청산을 목적으로 입안되었고, 대부분 지방자치단체 혹은 민간단체에서 관련 기준을 기획하여 운영되고 있었다.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는 단순한 과거의 산물이 아니라, 증거적, 정보적, 역사적 가치를 모두

가진 정보자원으로, 단순히 보존 혹은 폐기가 아닌 체계적인 수집과 관리, 디지털 아카이빙 나아가 일반 공개 및 이용이 필요한 정보자원이고 국가적 책임과 의무가 동반되어야 하는 역사적 자료이다. 부정적인 역사를 표현하는 정보자원이지만 이를 올바르게 명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조사와 역사적 맥락 분석, 다층적 가치 평가가 실행되어야 하고, 여러 기관에서 체계적으로 이들 과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의 수집, 선정, 폐기, 보존 그리고 이용 등을 수행하기에 특화된 공식 법령과 제도의 제정이 실행되어야 한다.

나.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 전문 DB 부재 및 콘텐츠 혼재

다양한 유형의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및 각종 위원회가 운영하는 도서관, 기념관, 연구소, 기록관 등에서 수집 및 관리, 디지털화하여 DB와 웹 사이트에서 제공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9개의 DB 가운데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를 주된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DB는 경기도 친일 문화 잔재 아카이브로,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친일 문화 잔재를 컬렉션으로 아카이빙하여 서비스하는 DB이다. 그러나 기관의 사업 추진 일정 등의 사유로 인해 2020년 이후 새로운 데이터가 탑재되지 않아 콘텐츠의 최신성과 지속성이 결여된 상태이고, 그 외의 DB에서는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를 대량의 소장 정보자원에 포함하여 서비스하고 있거나 메타데이터가 제대로 기술되어 있지 않아 빠르고 정확한 검색 및 식별, 획득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특히, 콘텐츠의 명칭이나 타이틀에 ‘친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주제명, 키워드에 ‘친일’을 부여하여 검색을 가능케 해야 하는 데 올바르게 실행되는 경우는 많지 않았고 대부분 카테고리 명을 통해 브라우징 검색을 시도해야 접근을 할 수 있었다. 더욱이, 검색어 혹은 색인어로 ‘친일(親日)’이 제시되지 않고 설명에 포함되어 기술되는 경우, 해당 콘텐츠가 ‘반민족행위’를 다루고 있는 지 의미 확인을 해야 하거나, ‘親一’과 같은 동음이의어를 가진 콘텐츠가 검색 결과로 나타나는 경우 콘텐츠를 모두 식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존재했다. <그림 2>는 독립기념관에서 제공하는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의 예시로, 자료명을 통해 ‘친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친일’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색인어 ‘친일’을 부여하여 콘텐츠에의 접근을 가능케 하는 올바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조선공로자명감(朝鮮功勞者銘鑑) 자료명	
자료명	상세내용
자료번호	1-020280-000
수량	1
유형	전체류 / 단행본류
재질	양지
재원	가로(19.00), 세로(26.40), 면수(1496)
시대	근대/일제강점기
생산자	아베 카오루(阿部磯)
생산처	민중시론사 조선공로자명감간행회(民衆時論社朝鮮功勞者銘鑑刊行會)
생산년도	19350000
색인어	아베 카오루, 아부론, 공로자 친일 협력

<그림 2> 독립기념관 DB에서 핵심 주제어 ‘친일’로 검색된 콘텐츠 예시

본 연구에서 살펴본 9개의 DB 가운데 현재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를 핵심 수집·관리 대상으로 관리하며 서비스하는 기관은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목적으로 구축하였으나 제대로 지속되지 않아 새로운 정보가 업그레이드되지 않거나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않고 중의적 표현을 가진 대상에 대한 미흡한 검토로 콘텐츠에의 접근성을 어렵게 하고 있었다. 또한 DB 내 검색 카테고리, 상세 분류 항목, 메타데이터가 정확하고 상세하게 작성되어 있지 않고 유사한 내용의 정보자원이 여러 DB에 혼재되어 있어 명확한 확인 및 파악을 할 수 없었다. 앞서 기술했듯이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는 불편하고 논쟁적인 역사적 맥락을 내포하고 있으나, 독립과 광복 이면에 존재하는 우리나라와 우리나라 국민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자원이다. 이들 콘텐츠는 궁극적인 단순 보관의 대상이 아니라, 콘텐츠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분석, 콘텐츠 간의 다방면적 관계성 검토가 충분히 동반되어야 하는 정보자원으로, 현재 서비스되는 콘텐츠와 앞으로 서비스될 콘텐츠의 올바른 이용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여러 DB에 산재 되어있는 정보자원의 정리와 함께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파악하여 수집부터 관리, 디지털 아카이빙, 이용이 가능한 전문 DB의 구축이 필요하다. 아울러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에의 정보 접근성과 활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들 콘텐츠에 특화되고 통일성이 반영된 분류체계와 메타데이터 설계를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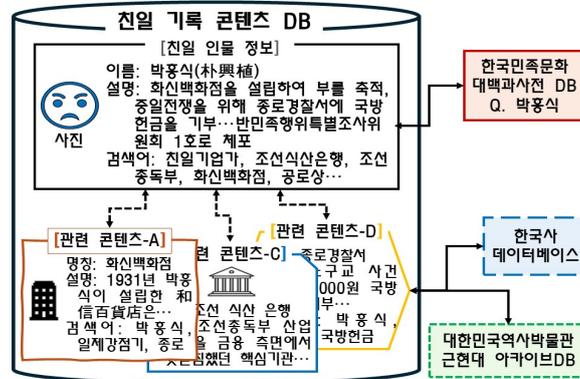
IV.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 이용과 관리를 위한 방안 제언

2005년 대통령 소속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 규명 위원회의 설립을 계기로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의 필요성과 중요성, 역사적·증거적 가치 등이 점차 언급되면서 이들 콘텐츠에 관한 관심이 조금씩 증가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직 활성화되고 있지 않고, 제도적, 기능적, 개념적으로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다음에서는 3장에서 살펴본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의 현황 분석과 시사점을 바탕으로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의 올바른 이용과 관리를 위한 개선 방안을 간단히 제언하고자 한다.

첫 번째,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의 사후 평가와 수집·폐기·관리·보존을 위한 공식적인 국가 제도가 정립되어야 한다.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는 여러 주제 분야, 유형, 형식 등을 다루고 있는 정보자원으로, 다양한 학문 분야 간의 융복합을 지원하고 정부 기관과의 협업을 실질적으로 진행하며 콘텐츠의 수집, 관리, 보존, 이용 그리고 폐기 등의 과정에 관한 결정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에 관한 법적·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1905년부터 1945년 사이에 생산된 콘텐츠의 경우, 수집 과정부터 기록적, 역사적, 법적 등 다양한 관점에서 시대적·구조적 검증을 수행해야 하고, 검증(진위성, 원본성, 상호 관계성 등)과 서로 간의 관계에 대한 사후 평가 인증 등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단계에 따른 법적·실무적·행정적 처리 진행을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국가적 차원의 기준과 정책이 필수적으로 구축·도입되어야 한다. 현재 ‘반민족행위’에 관련된 법령과 조례 등은 존재하지만,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를 주된 대상으로 직접 규율하는, 이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법령은 부재하고 일부 특정 지역의 자치법규에 한정되어 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지역에 따른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의 발굴과 (디지털) 아카이빙 구축, 이용 및 관리의 격차를 초래할 수 있고, 중앙 행정기관의 전체적인 관리와 규제 미흡, 관리의 주체 분산으로 인해 역사적 증거의 체계적 보존을 저해하고 분실하게 되는 우려를 발생시킨다. 즉,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의 선별, 수집, 폐기, 관리, 보존(디지털 아카이빙), 이용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운영 및 통제하며 국가적인 책임을 통해 지역별 콘텐츠의 균등한 조사 및 연구, 발굴이 가능할 수 있고 나아가 다른 국가 간의 콘텐츠 상호 교류 및 합동 연구, 역사 분쟁 등의 상황에 모두 적용 가능하도록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공식 법령 제도가 제정되어야 한다.

두 번째,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의 이용, 관리, 보존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와 메타데이터가 구축되어야 한다.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는 대중의 부정적인 인식, 역사적 맥락 및 이해에 대한 한계, 이용·관리·보존 등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이들을 수집 및 소장하여 디지털 아카이빙을 진행하는 DB는 매우 적은 상황이고, 이와 함께 앞서 언급하였듯이 관리와 통제를 위한 제도도 제정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앞서 살펴본 9개의 DB와 웹 사이트에서는 ‘친일’ 관련 콘텐츠를 디지털화하여 서비스하고 있으나, 개념적으로 명확한 의미 확인, 범주 설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검색 정확도가 낮고 동음이의어 혹은 독립운동(가), 광복, 반민족행위(자) 등과 같은 관련 주제와 혼재되어 미흡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검색 카테고리, 상세 분류 항목, 메타데이터(기술 요소) 등이 미비하거나 체계적으로 설계되어 있지 않아 정보자원への 접근이 제한적이었다. 현재 이와 같은 상황은 현존하는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에의 접근과 이용을 더욱 방해하고 이들 콘텐츠에 대한 정확한 메타정보 습득에 어려움을 제공하여 결과적으로 올바른 검색과 관리, 이용, 폐기 등에 여러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를 체계적으로 관리 - 수집, 선정, 폐기, 처리, 보존, 이용 등 - 하기 위해서는 친일 기록 전문 콘텐츠를 주된 대상으로 설계한 전문 데이터베이스 혹은 콘텐츠 주제별 세부 DB를 구축해야 하고,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로 판명되거나 발굴 예정인 정보자원을 다각도에서 수집 및 분석, 디지털 아카이빙하여 콘텐츠의 생산 시기, 유형, 내용, 관련 인물·기관·사건, 역사적 평가 등과 같은 콘텐츠의 특성을 반영한 메타데이터를 설계해야 한다. 특히, <그림 1>을 통해 살펴본 박홍식과 같이 하나의 주제 아래에 내용, 유형, 형태 등에서 콘텐츠의 다양성을 가지고 있거나 콘텐츠 간의 관계가 복잡한 경우, 원하는 콘텐츠에 손쉽게 검색 및 접근이 가능하고 콘텐츠에 대한 상세한 기술(記述) 항목이 제공될 수 있도록 통일된 분류체계와 메타데이터 표준을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관계형 데이터 구조와 연계 검색 기능을 갖춘 플랫폼 혹은 포털 시스템 설계를 진행하여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에의 다방면적 접근 및 검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그림 3> 참조).



〈그림 3〉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 DB 설계 예시

V. 결론

지난 40년간 일본 제국주의 탄압으로 우리 민족은 치욕스러운 역사를 겪었으나, 수많은 국민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 독립과 광복을 맞이할 수 있었다. 일제강점기는 우리에게 비극적인 역사이지만, 독립과 광복은 역사적·정보적 가치를 가진 기억해야 하는 역사로, 이와 관련된 각종 정보자원은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디지털화하여 다양한 기관 및 DB에서 서비스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비해 ‘친일’과 관련된 정보자원에 대한 조사 및 연구는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친일’은 독립과 상반되어 일본 제국주의에 협력하여 국민에게 피해를 끼친 행위, 인물, 기관, 정책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로 인해 우리 사회에서는 이들을 부정적인 기억이자 불편한 역사로 평가되어 이와 관련된 정보자원도 일제 잔재이자 네거티브 문화재로 판별, 청산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한 상황이다. 그러나 역사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함께 과거의 불편한 역사도 왜곡 없이 후세에 전달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면서 역사의 공(功), 과(過)를 모두 올바르게 정확하게 전달해야 하는 책임 의식이 강해지기 시작했고,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의 보존과 활용에 관한 관심도 점차 확대되기 시작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친일의 역사를 담은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 전반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이들 콘텐츠를 대상으로 제도적·기술적 관점에서 법령과 정책,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콘텐츠를 조사 분석하였고 이들을 바탕으로 향후 이용 및 관리 방안을 제안하였다.

우선, 법령과 제도의 경우,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를 주된 대상으로 직접 규율하는 독립적 법령이나 정책은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친일’에 관련된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만 반민족행위의 규명과 청산에 초점을 두고 있고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 자체의 수집·관리·보존·이용을

포괄하는 체계적인 기준과 정책은 제시하고 있지는 않았다. 다시 말해, 친일 행적의 역사적 판단을 위한 법적 틀은 존재하지만,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 관리 체계는 부재한 상황이었다. 이어서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 서비스하는 DB에 대해 살펴본 결과, 현재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를 제공하는 DB는 존재하지만, 이를 전문적·집중적으로 운영하는 통합 DB는 사실 상 구축되어 있지 않았다. 예를 들어 '경기도 친일 문화 잔재 아카이브'에서는 지역 단위에서 친일 문화 잔재를 수집·제공하고 있었으나, 연구 지원 중단으로 최신성 및 지속성 측면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었고, 여러 기관에서도 친일 관련 자료를 서비스하고 있었으나, 대부분 독립운동 및 항일 역사 자료와 혼재되어 있거나 메타데이터의 설계가 미흡하여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의 정확한 범주와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또한, '친일'이라는 용어의 중의적 표현과 동음이의어 문제, 주제명·키워드의 비표준화 등이 검색의 정확성과 접근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는 생산·제작 목적, 시대, 유형, 내용에 따라 복합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고 인물이나 사건, 지역 등을 중심으로 다층적·복합적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어, 단편적 접근이 아닌 관계 기반의 통합적 관리 체계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는 불편한 역사의 산물이지만, 동시에 독립과 항일, 광복의 역사와 긴밀하게 연결된 중요한 역사적 증거이다. 다시 말해서 단순한 청산과 폐기의 대상이 아니라, 비판적 성찰과 역사 교육을 위한 자료로 체계적인 수집·관리·보존·활용이 수행되어야 하는 공공 기록 콘텐츠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태조사와 분석의 진행을 통해 향후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의 올바른 이용과 관리를 위해 (1)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의 모든 처리 과정(선별·수집·폐기·보존·디지털 아카이빙·이용)과 사후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공식 법령과 정책을 정립해야 하고, (2) 전문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표준화된 메타데이터 및 분류체계를 구축하여 콘텐츠 간 관계성을 구조화하고, 이용자의 탐색과 접근을 지원하는 통합 플랫폼을 설계해야 한다는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궁극적으로,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에 대한 체계적 조사와 관리, 그리고 공적 제도에 기반한 보존과 활용, 폐기는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은폐하지 않고 온전히 기록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이에 우리는 친일 역사를 직시하고 역사적 정의를 확립하여 미래 세대에게 균형 잡힌 역사 인식을 전달할 수 있도록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에 관한 연구를 지속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의 체계적 발굴과 제작, 관리를 위해서는 학문 간의 융복합 연구와 합동 조사가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친일의 역사'는 아직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연구 분야이다. 이에 본 연구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에서는 친일 기록 정보 콘텐츠에 대한 사회적·국민적 인식을 조사하고 이용을 위한 전문 DB 구축 및 메타데이터 설계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 경기도 메모리 (발행년불명). 경기도 친일 문화 잔재 아카이브. 출처:
<https://memory.library.kr/collection/show/220000811?ggmType=T>
- 국가기록원 (발행년불명). 디지털 컬렉션. 출처:
<https://www.archives.go.kr/next/newtheme/contentsList.do>
- 국가법령정보센터 (발행년불명). 법령. 출처: <https://www.law.go.kr/LSW//main.html>
- 국립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아카이브 (발행년불명). 통합검색. 출처:
<https://www.nmkpg.go.kr/archives/index.do>
- 국립국어원 (발행년불명). 표준국어대사전. 출처: <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
- 국립중앙도서관 (발행년불명).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 출처:
<https://www.nl.go.kr/newspaper/>
- 국사편찬위원회 (발행년불명).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출처: <https://db.history.go.kr/>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914호.
- 김미진 (2018). 일제강점기의 ‘부정적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의 변화: 충남금융조합연합회 회관을 사례로.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 김민철 (2005). ‘친일’ 문제 – 인식, 책임, 기억. 한국민족운동사연구, 45, 255-294.
-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발행년불명). 근현대 아카이브. 출처:
<https://archive.much.go.kr/index.do>
- 독립기념관 (발행년불명). 한국 독립운동 정보시스템. 출처: <https://search.i815.or.kr/>
- 민족문제연구소 (2017. 3. 27.). ‘친일’이란 명칭을 바꿔야 하지 않나 생각되네요. 출처:
<https://www.minjok.or.kr/archives/87609>
- 서동희 (2015). 친일반민족행위자 청산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창원대학교.
- 서소리, 조우제 (2022). 독립운동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에 관한 연구. 한국독립운동사연구, 82, 335-362. DOI: 10.15799/kimos.2023..82.009
- 우지원, 이영학 (2011). 과거사 관련 위원회 기록정보콘텐츠 구축방안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1(1), 67-92.
-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1494호.
- 최병문 (2019. 8. 14). 친일과 친일파 그리고 토착 왜구, 울산저널i, 출처:
<https://www.usjournal.kr/news/newsview.php?ncode=1065580892563054>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0646호.
-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2009). 친일인명사전. 서울: 민족문제연구소.

한국국학진흥원 (발행년불명). 근대 기록 문화 아카이브. 출처: <https://modern.koreastudy.or.kr/>
한국학중앙연구원 (발행년불명).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출처: <https://encykorea.aks.ac.kr/>

•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Act on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of Modern and Contemporary Cultural Heritage.
Chapter 20914.

Choi, Byung-Moon (2019, August 14). Pro-Japanese, pro-Japanese group, and Indigenous
Japanese Pirates. Ulsanjournal. Available:

<https://www.usjournal.kr/news/newsview.php?ncode=1065580892563054>

Gyeonggi Memory (n.d.). Archive of pro-Japanese culture remnants in Gyeonggi.
Available: <https://memory.library.kr/collection/show/220000811?ggmType=T>

Japanese Colonial era Special Act on Investigation of Anti-National Activities, Chapter
11494.

Kim, Mi-Jin (2018). Changes in Perception of 'Negative Cultural Heritage' in the Period
of Japanese Occupation: A Case Study on Chungnam Financial Union Combination
Hall. Master's thesis, Kongju National University.

KIM, Min-Cheol (2005). The matter of 'chinit'(collaboration for Japan-Imperialism):
recognition, responsibility, recollection. Journal of Studies on Korean National
Movement, 45, 255-294.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n.d.). Law Search. Available:

<https://www.law.go.kr/LSW//main.html>

National Archives (n.d.). Digital Collection. Available:

<https://www.archives.go.kr/next/newtheme/contentsList.do>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n.d.). Database of Korean History. Available:

<https://db.history.go.kr/>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n.d.). National Standard Korean Dictionary. Access
by: <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

National Library of Korea (n.d.). South Korean Newspaper Archive. Available:

<https://www.nl.go.kr/newspaper/>

National Memorial of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n.d.). Search. Access by:

- <https://www.nmkpg.go.kr/archives/index.do>
- National Museum of Korean Contemporary History (n.d.). Modern and Contemporary Archives. Available: <https://archive.much.go.kr/index.do>
- Pro-Japanese Dictionary Compilation Committee (2009). A Pro-Japanese Dictionary. Seoul: The Center for Historical Truth and Justice.
- Seo, Dong-Hee (2015). A study on liquidating 'Pro-Japanese and Anti-National Collaborators'. Master's thesis,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 Seo, So-Ri & Jo, U-Je (2022). A study on the construction of digital archive for independence movement. *Journal of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Studies*, 82, 335-362.
DOI: 10.15799/kimos.2023..82.009
- Special Act on Asset special Confiscation for Pro-Japanese and Anti-National Collaborators to the State. Chapter 10646.
-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n.d.). Encyclopedia of Korean Culture. Available: <https://encykorea.aks.ac.kr/>
- The Independence Hall of Korea (n.d.). Information System for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Available: <https://search.i815.or.kr/>
- The Institute of Ethnic Studies (2017, March 27). I think we need to change the name, 'Pro-Japanese'. Available: <https://www.minjok.or.kr/archives/87609>
- The Korean Studies Institute (n.d.). A Cultural Archive of Modern Records. Available: <https://modern.koreastudy.or.kr/>
- Woo, Jee-Won & Lee, Young-Hak (2011). A study on establishing measurement of the record information contents in Past History Commission.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1(1), 67-92.